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

• • • •

2025-04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5-04]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

Contents

I. 서론	1
II. 무역 불균형 핵심 국가 분석	3
III. 무역 불균형지수 지표 분석	7
IV. 결론 및 시사점	18

* 「The Trade Imbalance Index: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tion to Address Trade Distortions(ITIF, 2025.3)」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

요 약

■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외 무역 관계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취임 초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수 국가를 겨냥해 통상 압박을 본격화**

-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25.1.20)」을 통해 상무부에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와 협력하여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
- 다만,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중상주의 무역 관행을 채택한 국가가 증가하면서 대응 과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광범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 대두

■ **이에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무역 중상주의 및 규범 위반 수준이 높은 국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불균형지수(Trade Imbalance Index)'를 개발**

- ITIF는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국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48개국을 대상으로 ①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②무역 제한 조치 ③세금·규정 ④지식재산권의 4대 분야 11가지 지표를 평가

■ **(①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무역상대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할 때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DP 대비 무역 수지와 같은 상대값이 아닌 무역 수지의 원시값을 분석**

-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GDP 대비 상품 무역 수지가 아닌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를 반영
 - 심각한 무역 불균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 조작,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제약의 징후로 간주

※ 대미 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를 살펴본 결과,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이 무역 제한 또는 재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 **(②무역 제한 조치) 전체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벽(NTB)의 확산 정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점수를 반영**

- (단순 평균 관세율 지표)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해 '22년 각국이 전 수입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가중치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여 국가별 점수 산출

- 보호주의 관세 정책은 경쟁 억제, 소비자 가격 인상,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원인으로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 가능

- ※ 인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이 고관세율을 유지하여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

- (비관세 무역 장벽 지표) 프레이저 연구소의 '24년 경제자유지수에서 측정된 비관세 무역 장벽의 확산 수준에 따라 각국에 점수 부여

- 비관세 무역 장벽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규정 준비 비용 증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 트럼프 정부의 무역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지표) '23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나타난 서비스 무역 부문의 제한 수준을 기준으로 각국에 점수 부여

- 과도한 제한으로 비용 증가, 시장 진입 제약,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공급 감소, 미국 소비자의 서비스 비용 인상을 초래 가능

- ※ 점수가 낮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

■ (●세금·규정)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의 범위, 「디지털서비스세(DST)」 범위,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 반독점 과징금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불공정 경쟁 과징금의 존재 유무를 평가

- (디지털시장법 지표) 디지털 시장 규제가 기업 매출 제한, 비즈니스 관행 제한, 규제 준수 비용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수익성과 혁신을 저해하므로 「디지털시장법」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 체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 「디지털시장법」 또는 유사 법률을 수립하였거나 EU와 같은 지역 연합(regional entity)의 일원으로 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는 EU, 노르웨이, 태국, 영국 등

- (디지털서비스세 지표) 기업 수익에 대한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를 파악해 점수 부여

- 디지털서비스세는 기업의 운영 비용 상승, 수익성 감소, 미국 기술 기업의 경쟁력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

- ※ 점수가 낮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영국 등 1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4개국에 포함

- (디지털 경제 관련 과징금 부과 지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반영해 점수 부여

※ 미국 기업에 디지털 경제 과징금을 부과하여 트럼프의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호주, 일부 EU 회원국, 인도, 한국, 영국 등

- (의약품 가격 통제 지표) 엄격한 약가 통제에 따른 미국 제약 회사의 수익 감소, 연구개발 투자 역량 제한으로 차세대 약물 개발 저해되고 미국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를 종합해 국가별 점수 부여

※ 중국, 인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을 근거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13개국에 포함

- (반독점 과징금 지표) 독점금지법을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규제 불확실성 야기, 규정 준수 비용 증대 등이 발생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업 대상 반독점 과징금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영국은 -1.2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12대 불공정 국가에 포함

■ (④지식재산권) '24년 무역대표부(USTR)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과 미 상공회의소 국제 지식재산지수('24, 제12판)의 국가 점수를 고려

- (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 미국 지식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국가를 분류한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포함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미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 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

- (국제 IP 지수) 지재권 보호가 취약할 경우 위조, 불법 복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상공회의소 국제지식재산권 지수에서 산출한 지재권 프레임워크 강도를 기반으로 점수 부여

※ 지재권 보호 수준이 낮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성 무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 추진 이후 2개월 간 우리 정부가 마련한 관세 관련 통합창구 '관세대응 119'에 3,000건 이상의 상담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내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관세대응 119 개시 이후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여부, 관세율에 대한 문의가 집중(68%)

-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07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3%가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직접 영향 14.0%, 간접 영향 46.3%)

- 영향권에 속한 기업은 미국향 수출기업에 대한 부품·원자재 납품 기업(24.3%), 미국향 완제품 수출 기업(14.2%), 중국향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 이는 미국향 직접 수출 기업을 비롯해 미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 및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

■ **우리 정부는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유예 기간(90일) 동안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내 기업의 대비를 지원할 계획**

※ 기본 관세 10% 외, 중국 125%, EU 20%, 일본 24%, 우리나라 25% 등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 이후 90일간 시행 유예 결정

-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을 목표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구성해 총력 대응 예정
- 세부적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부처 간 협업체계 운영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품목 분류 서비스 제고, 원산지 판정 지원, 수출신고 부담완화,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

■ **한편, 미국 정부가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ITIF의 무역 불균형지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수의 평가 기준과 산출 방법을 파악에 정부와 기업 대응 시 활용 가능**

-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무역 수지, 관세·비관세 장벽, 디지털세, 지재산 보호 수준 등 세부 항목별로 한국의 위치와 위험 요인, 강점을 파악하고 대미 협상 전략의 기초 자료로 이용
-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IT서비스 무역수지, 단순평균관세율, 디지털 경제/반독점 과징금 등 일부 영역이 불공정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통상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 반영
- 무역 불균형지수가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미국 무역정책의 예측 지표로서의 기능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EU·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공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

【 원문정보 】

- ITIF, The Trade Imbalance Index: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tion to Address Trade Distortions, 2025.3

I. 서론

■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외 무역 관계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취임 초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수 국가를 겨냥해 통상 압박을 본격화**

-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25.1.20)」을 통해 상무부에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와 협력하여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
- 다만,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중상주의 무역 관행을 채택한 국가가 증가하면서 대응 과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광범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 대두
 - ▲중상주의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가 ▲공정한 무역 질서 회복 시 미국이 가장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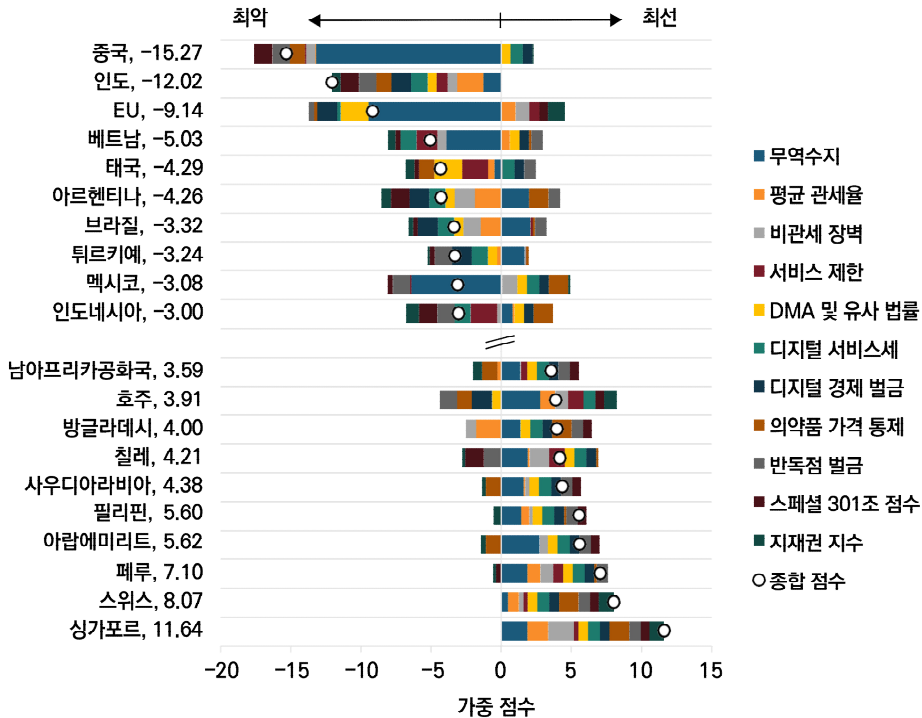
■ **이에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무역 중상주의 및 규범 위반 수준이 높은 국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불균형지수(Trade Imbalance Index)'를 개발**

- ITIF는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국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48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수지, 무역 제한 조치, 세금, 지식재산권의 4대 분야 11가지 지표를 평가
 - * 이 중 15개국은 EU로 통칭되나, 예외적으로 무역 수지 지표에서는 EU 회원국 전체를 의미
 - (①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무역상대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할 때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DP 대비 무역 수지와 같은 상대값이 아닌 무역 수지의 원시값을 분석
 - ※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그 적자 규모가 자국의 GDP 대비 작더라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라도 상당 수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행하는 경우 제재 근거로 작용 가능
 - (②무역 제한 조치) 전체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벽(NTB)의 확산 정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점수를 반영

- (㉓세금·규정)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의 범위, 「디지털서비스세(DST)」 범위,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 반독점 과징금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불공정 경쟁 과징금의 존재 유무를 평가
- (㉔지식재산권) '24년 무역대표부(USTR)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과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 지식재산지수*의 국가 점수를 고려

* (U.S.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IP Index) 특허권, 저작권 등 50여개 지표를 활용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평가

〈그림 1〉 ITIF 무역 불균형지수



- 분석 결과 중국, 인도, EU, 베트남, 아르헨티나가 ITIF 지수 하위 5개국으로 평가된 반면, 싱가포르, 스위스, 페루,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등은 미 행정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
- 지수 하위/상위 국가의 전체 가중 점수가 표시되며,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순으로 정부의 우선 대응 대상국을 설정 필요
- ITIF는 무역 불균형지수 평가 결과 외에도 가장 문제시되는 중국, 인도, EU의 무역·경제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각 지표별 각국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 중상주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을 제언

II. 무역 불균형 핵심 국가 분석

1. 중국

- 무역 불균형지수에서 중국, 인도, EU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경제 관계 재정립 시 특히 유의해야 할 국가로 두각
- 무역 불균형지수 최하위 국가로 선정된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공산품 무역에서 약 3조 5,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WTO 가입 시 미국 및 타 무역 상대국에 제시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 규모가 '23년 2,790억 달러에 도달한 데 이어, '24년에는 2,950억 달러로 증가
 - 이는 전년도 중국의 전 세계 무역흑자 약 1조 달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국의 수출 상품이 글로벌 시장을 대거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
 - ※ '22년 기준 중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6.5%
 - 중국은 지속적인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로 '24년 미국대표부(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에 등재되었는데, 「USTR 2024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이전, 영업 비밀, 위조, 온라인 불법 복제, 저작권법, 특허 및 관련 정책 등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 중국은 세계 최대 위조·불법 복제 상품 공급처이자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
 - 지식재산권침해방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
 - ※ CNBC글로벌CFO협의회 보고서('19)에 따르면 '18년 중국이 북미 기업 5곳 중 1곳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것으로 집계
 - Google, NVIDIA 등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였고(과거 Qualcomm 등에 과징금 부과), 의약품 부문에서도 엄격한 약가 통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가 의약품 선정 과정에서 중국 기업을 우대
 - 자국 시장 진출 조건으로 기술·지식재산 강제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는 구조적인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제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 기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강제(compulsion)' 전략을 '배제(expulsion)' 전략으로 전환해 나가는 추세

- 국가 통신 시스템에서 미국 칩 제조업체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Wall Street Journal), 이로 인해 AMD, Intel을 포함한 다양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 금년 초 중국 정부가 '27년까지 자국 최대 통신업체들에게 네트워크에 장착되는 외국산 프로세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7년까지 금융·에너지·기타 분야 국유 기업의 IT 시스템 내 해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도록 한 79호 문건(Document 79)의 조치와 유사
- 서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BYD, Geely 등 전기차 제조업체에 자국산 자동차 칩 구매 대폭 증대를 요구
 - ※ 공업정보화부는 가능한 해외산 반도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지시
-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에서 반도체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 전략 핵심 목표가 수입 대체와 자립 달성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WTO 가입 시 무역 상대국에게 표방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
 -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당시 전 부문의 수출 무역 장벽 제거와 자국 시장 개방을 약속

2. 인도

■ 두 번째 하위국으로 분석된 인도는 '24년 457억 달러('23년 433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

- 인도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14.3%, 무역 가중 기준 관세율은 약 12%인데 반해 미국의 관세율은 2.2%에 불과
 - IT 제품, 태양에너지 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자본재 등 지재권 집약 상품에 고관세율 지속
- '16년 자국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및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외국계 기업에 6%의 균형부담금*을 부담시키며 서비스 무역 제한 측면에서 4번째 하위 점수를 기록
 - * (equalization levy) 특정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 이후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균형부담금을 확대하여 외국계 사업자 전자상거래 공급·서비스 총소득의 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도입하고('20), EU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디지털경쟁법」 초안*을 공개('24.3)
 - * (Digital Competition Act) EU의 과도한 경쟁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사전 규제 모델 도입을 추진
- EU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인도 경쟁당국 또한 Meta, Google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해 상당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
 - 경쟁위원회(CCI)가 사용자 데이터 공유 관련 지배력 남용 건으로 Meta에 2,450만 달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불공정 행위로 Google에 1억 5,400만 달러 징수

- 인도는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이 쉽지 않은 국가로,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 등재
 - 신규성, 진보성, 산업 적응성 외에도 추가적인 특허 자격을 설정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특허법」 제3(d)조는 특정 유형의 의약품과 화합물에 대한 추가 요건(진보성, 개선 효과)을 두어 특허 등록을 제한
 - 그 외 불법 영상 녹화를 통한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 대응도 필요
- 다만, 미국-인도 정상 회담에서('25.2)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양국의 무역 관계 개선 가능성을 확인

3. EU

■ 세 번째 낮은 점수를 기록한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무역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EU 전역 최소 270개 기관이 100개가 넘는 디지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디지털시장법(DMA)」은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산업의 중소기업과 소비자 경쟁을 촉진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불투명한 광고, 허위 정보 유포 등을 방지

-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이 중국, 유럽의 경쟁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실제 EU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Alphabet, Apple, Meta의 불이행 조사를 개시

※ 유럽의회 보고관 Andreas Schwab는 「디지털시장법」이 5대 미국 디지털 기업(Google, Amazon, Apple, Facebook, Microsoft)을 겨냥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자국 법률을 사용하여 미국 기업에 징벌적 반독점 벌금을 부과
 -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Apple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15억 파운드(미화 19억 달러) 집단 소송에 직면하였고, 경쟁시장청(CMA)은 Amazon과 Microsoft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

※ Apple이 앱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

- EU는 의약품·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통신 제품, 화학제품 등 여러 첨단기술 산업에서 상당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23년 2,087억 달러)

※ 대미 의약품 무역 흑자 대부분은 유럽 국가가 시정 중인 광범위한 약가 통제 및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적정 가격 책정 실패에 기인

- 27개 회원국 중 7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디지털 지배’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독일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 해당
 - * 몰타,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 EU는 비교적 낮은 단순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역내 가격을 높이는 다양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수수료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EU는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10% 관세를, 미국은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유럽의 부가가치세(VAT)가 추가되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총 30%로 상승 가능

Ⅲ. 무역 불균형지수 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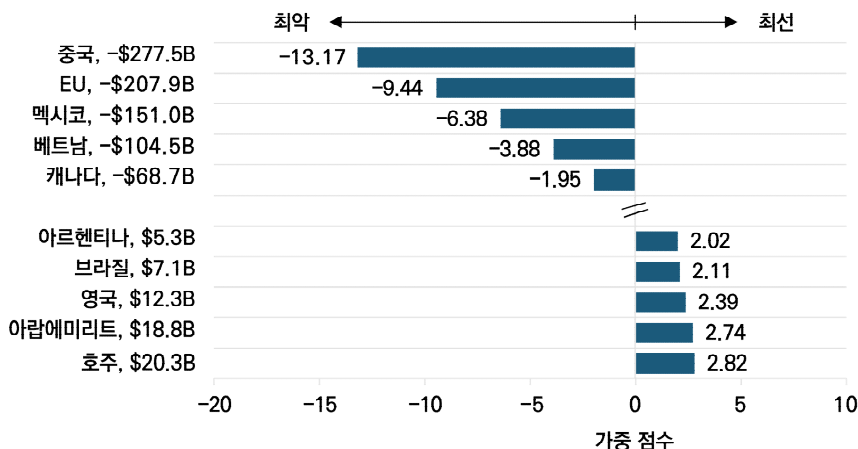
1.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

■ ①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 ②무역 제한 조치 ③세금·규정 ④지식재산권의 주요 지표를 분석

■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 지표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USA Trade)와 OECD의 '23년 대미 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흑자/적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국가에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

-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 조작,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제약의 징후로 간주되므로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 지표를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GDP 대비 상품 무역 수지가 아닌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를 반영
 - ※ 미국 정부는 GDP 대비 큰 적자를 기록한 국가보다, 절대적인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상품·정보서비스 무역 수지 점수가 낮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정책 강화, 무역 협상 재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 뚜렷
 -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중간 수준 흑자 기록국은 중간 점수를, 무역 적자나 무역 균형을 기록한 국가에는 높은 점수 부여

〈그림 2〉 상품·IT서비스 무역 수지와 가중표준점수(가중치=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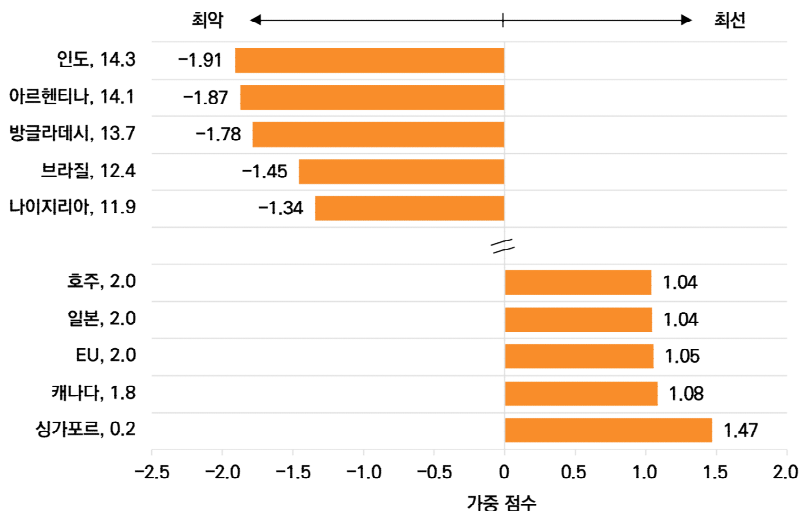
- 대미 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를 살펴본 결과,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이 무역 제한 또는 재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 2,775억 달러로 최대 흑자를 낸 중국에 이어, EU 2,080억 달러, 멕시코 1,510억 달러, 베트남은 1,04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반면, 미국과 비교적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아랍에미리트, 영국은 모두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 수지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2. 무역 제한 조치

■ (단순 평균 관세율 지표) 세계은행 데이터(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활용해 '22년 각국이 전 수입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가중치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여 국가별 점수 산출

- 고관세율이 미국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비용은 증가, 시장 접근성은 감소시킨다는 판단 하에 단순 평균 관세율 지표를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보호주의 관세 정책으로 경쟁 억제, 소비자 가격 인상,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야기되어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 지표 점수가 낮은 국가에 대한 면밀한 무역 조사가 필요
 - 높은 단순 평균 관세율 적용 국가는 낮은 점수를, 적정 관세율 적용 국가는 중간 점수를, 낮은 관세율 적용 국가는 높은 점수를 획득

〈그림 3〉 전 품목 단순평균관세율(원시값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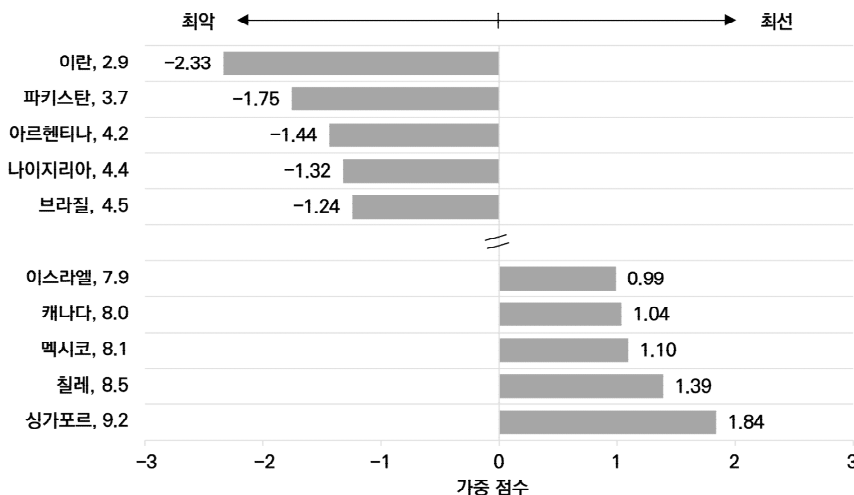
- 인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고관세율을 유지하여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
 - 단순 평균 관세율이 10%를 상회하는 인도(14.3), 아르헨티나(14.1), 방글라데시(13.7) 등이 미국 무역 의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데 반해,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설정

■ (비관세 무역 장벽 지표) 프레이저 연구소*의 '24년 경제자유지수에서 측정된 비관세 무역 장벽의 확산 수준에 따라 각국에 점수 부여

* (Fraser Institute) 캐나다 공공 정책 싱크탱크로, 각국 제도와 정책의 경제적 자유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발표

- 비관세 무역 장벽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규정 준비 비용 증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동 지표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역 제한, 규제 검토 강화등의 조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편
 - 광범위한 비관세무역 장벽(NTB) 보유국에 낮은 점수를, 중간 수준 국가는 중간 점수를, 장벽을 최소화한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4〉 비관세 무역 장벽(원시값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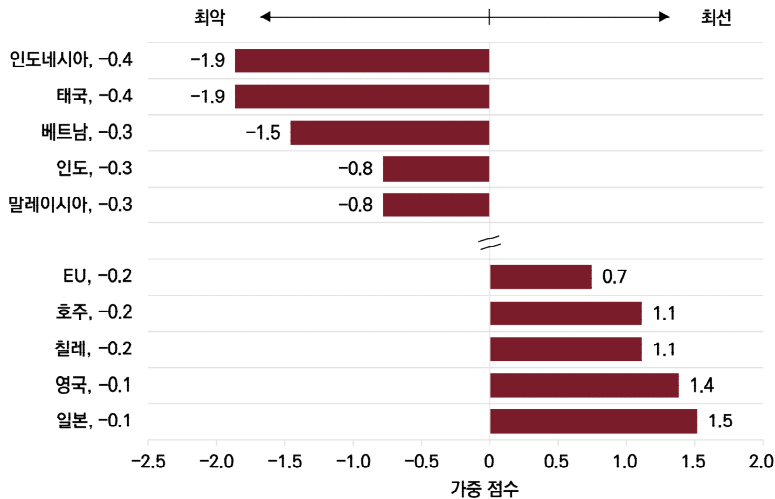
- 점수가 낮아 트럼프 정부의 무역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 아르헨티나는 약 1,500개 제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non-automatic 수입 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허가 유효 기간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나이지리아는 수입업체에 불리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입 식품·의약품·화장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적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반면, 싱가포르와 칠레는 관세 무역 장벽 숫자가 가장 적은 국가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 저조

■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지표) '23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나타난 서비스 무역 부문의 제한 수준을 기준으로 각국에 점수 부여

-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금융·통신·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미국 기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과도한 제한으로 비용 증가, 시장 진입 제약,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공급 감소, 미국 소비자의 서비스 비용 인상을 초래 가능
-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 무역 정책을 수립한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제한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에는 중간 점수를, 대체로 개방형 서비스 무역 정책을 수립한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5〉 서비스무역제한지수(원시값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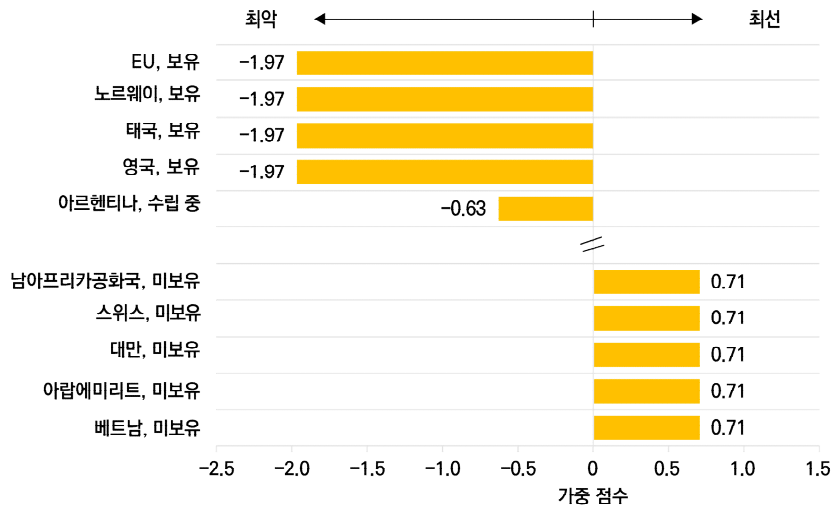
- 점수가 낮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
- 인도네시아는 법률 및 회계 서비스, 통신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태국은 최근 몇 년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개혁이 둔화되면서 서비스 무역에 제약 발생
-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영국, 칠레, 호주는 가장 개방적인 서비스 무역 정책을 수립하여 미 행정부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은 편
- ※ 이 중 일본은 안정적인 서비스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물류·보험 부문의 일부 자유화 추진

3. 세금·규정

■ (디지털시장법 지표) 「디지털시장법」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 체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에 점수 부여

-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디지털 시장 규제가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동 지표를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해당 규제가 기업 매출 제한, 비즈니스 관행 제한, 규제준수 비용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수익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시행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디지털시장법」 및 유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관련 규정 개발 추진 국가에는 중간 점수를, 미수립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6〉 디지털시장법 또는 유사법 보유 유무(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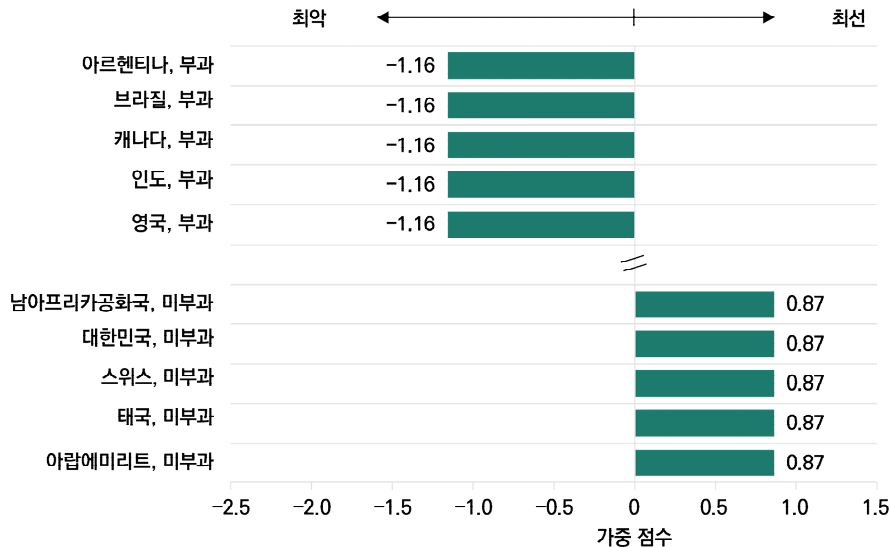
- 「디지털시장법」 또는 유사 법률을 수립하였거나 EU와 같은 지역 연합(regional entity)의 회원국으로 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는 EU, 노르웨이, 태국, 영국 등이 미 정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
 - 태국은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결합한 「플랫폼 경제법(Platform Economy Act)」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도 디지털 기업에 제한을 가하는 「디지털시장 경쟁소비자법*」('24)을 수립
 - *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of 2024
 - 표준 점수가 0.7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대만,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20개국은 관련 법률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척도에 따른 보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

■ (디지털서비스세 지표) DST-Global Tracker와 Digital Policy Aler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수익에 대한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를 파악해 점수 부여

※ ▲(DST-Global Tracker) 글로벌 디지털서비스세 도입·논의 현황 추적 사이트 ▲(Digital Policy Alert's Digital Services Taxes Tracker)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서비스세가 기업의 운영 비용 상승, 수익성 감소, 미국 기술 기업의 경쟁력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디지털서비스세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미시행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7〉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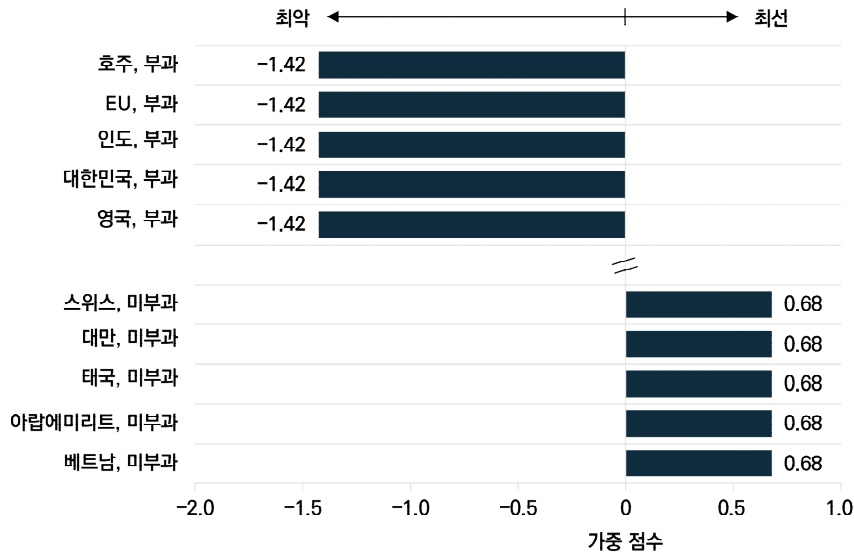


- 점수가 낮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영국 등 1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4개국에 포함
 - 영국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5억 파운드(미화 6억 3,500만 달러), 자국 내 매출 2,500만 파운드(미화 3,180만 달러)를 초과하는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에 2%의 세금을 징수
 - 캐나다는 자국에서 2,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 3%의 세금을, 인도는 광고 6%, 상품·디지털 서비스에 2%의 세금 부과
 - 호주, 일본, 멕시코, 한국, 스위스 등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지 않는 18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 관련 과징금 부과 지표) Digital Policy Alert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반영해 점수 부여

- 특정 국가의 규제환경이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 지표를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국가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8〉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경제 과징금 유무(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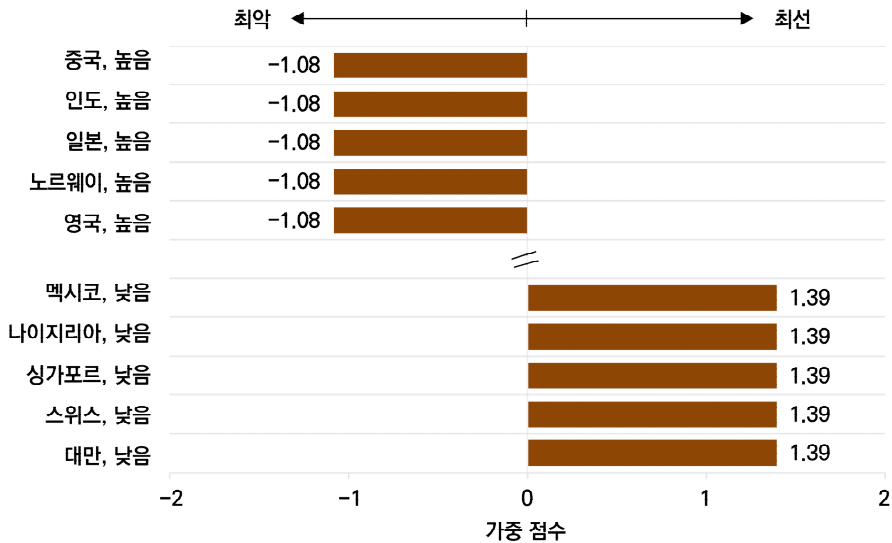
- 미국 기업에 디지털 경제 과징금을 부과하여 트럼프의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호주, 일부 EU 회원국, 인도, 한국, 영국 등
 - 아르헨티나의 공공정보접근청(APA)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접근 요청을 거부한 Google에 과징금 180,000 페소 징수
 - 인도 중앙은행은 Amazon Pay가 '선불 결제 수단 관련 종합 지침' 및 '고객 확인 관련 종합 지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60만 루피의 과징금 부과
 -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 일본, 멕시코, 스위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은 보복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 해당

■ (의약품 가격 통제 지표) 56개국의 혁신 정책을 평가한 ITIF 보고서*와 기타 외부 자료의 국가 순위를 바탕으로 각국에 점수 부여

* (Contributors and Detractors: Ranking Countries' Impact on Global Innovation) ITIF가 56개국의 혁신 정책을 27개 지표로 평가해 1인당 혁신 기여도 등을 분석('20)

- 엄격한 약가 통제에 따른 미국 제약 회사의 수익 감소, 연구개발 투자 역량 제한으로 차세대 약물 개발 저해되고 미국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 ITIF 분석에 따르면 실제 제약 회사들은 현 약가 규제가 지속되면서, 잠재 수익이 감소하고 R&D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높은 수준의 약가 통제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중간 수준 국가에는 중간 점수를, 최소한의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그림 9〉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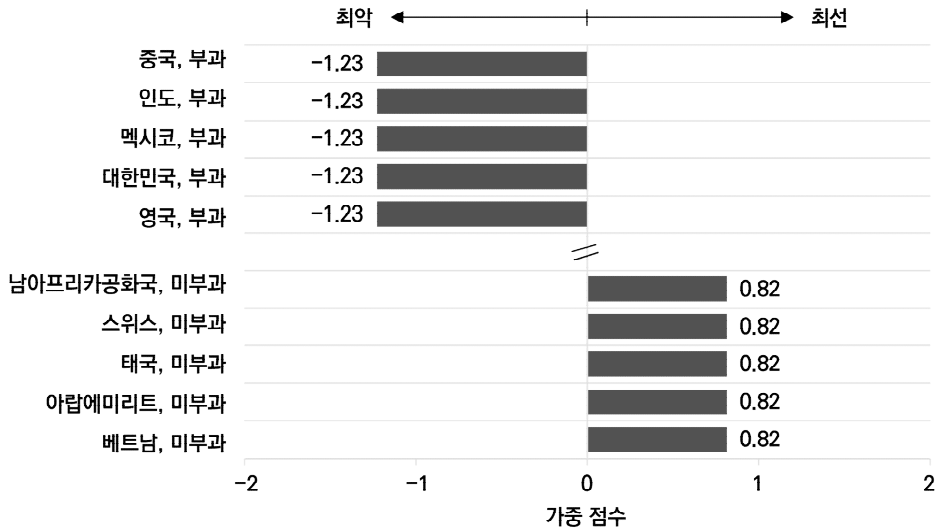
- 중국, 인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을 근거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13개국에 포함
 - 일본은 유럽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의약품 가격 통제를 실시한 이후 바이오제약 산업이 위축되어 '95년~'18년 글로벌 제약 산업 내 일본의 부가가치 비중이 18.5%에서 5.5%로 약 70% 감소
 - ※ 영국의 경우 처방약 가격이 미국의 53% 수준에 불과
 - 반면, 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및 6개 국가는 약가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무역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은 상황

■ (반독점 과징금 지표) 기업 대상 반독점 과징금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에 점수 부여

- 독점금지법을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규제 불확실성 야기, 규정 준수 비용 증대, 특히 대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독점 과징금 지표가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고액의 반독점 과징금은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자국 경쟁업체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도구로 간주 가능
-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과징금 부과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

〈그림 10〉 반독점 벌금 부과 여부(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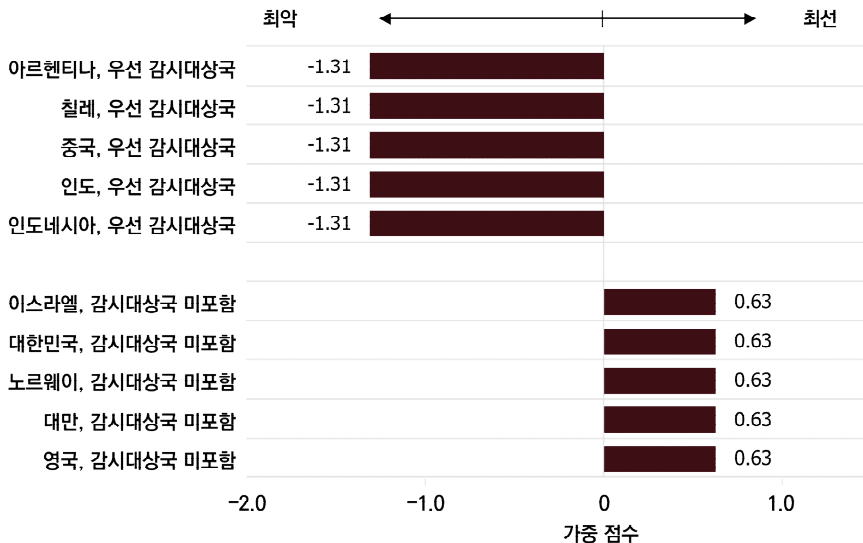
-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영국은 -1.2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12대 불공정 국가에 포함
 - 동 지표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15년 Qualcomm에 9억 7,500만 달러의 불합리한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Google과 NVIDIA에도 근거가 빈약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
 - 호주는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허위 표시(misrepresentation)를 근거로 Google에 과징금 부과하였는데, 위반 건당 최대 금액은 5,000만 달러 또는 위반 기간 중 해당 기업 호주 매출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규정
 - 영국에서 Apple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5억 파운드(약 19억 달러) 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25.1)
 - 멕시코 당국은 Walmart의 멕시코 지사인 Walmex의 반경쟁 행위 및 HP의 Plantronics 합병 시 적절한 동의 획득 미비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 이와 대조적으로 우수한 점수를(0.8점) 받은 남아공, 스위스, 태국, 아랍 에미레이트, 베트남 등 20개국은 보다 기업 친화적 기조를 표출
- ※ 엄격한 경쟁 정책과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고액 과징금으로 알려진 EU는 -0.4의 중간 점수 획득

4. 지식재산권

■ (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 미국 지식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국가를 분류한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포함 여부에 따라 각국에 점수 부여

-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미국 무역 상대국의 지재권 보호·집행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목록(집중적으로 지재권을 침해)에 포함된 국가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감시대상국 목록 국가에는 중간 점수를, 동 보고서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
 -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지재권 보호가 취약한 경향이 있는데, 부적절한 지재권 정책·집행으로 미국 지재권 침해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림 11〉 '24 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상태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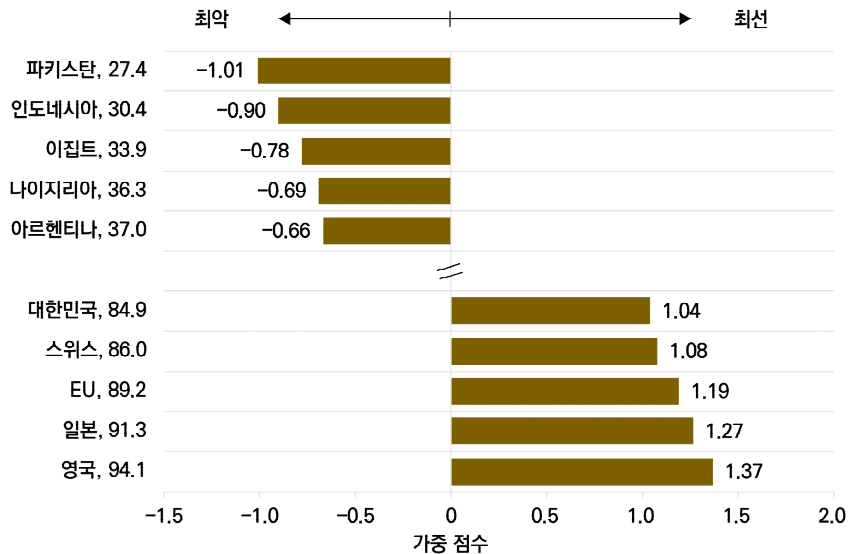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미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 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
 - 특히 중국은* 글로벌 최대 지재권 도용국인 만큼 보복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 또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
 - * 강제 기술 이전 정책 폐기 약속 또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
 - '24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르웨이, 이스라엘, 대만, 영국, 한국 등(0.6점 획득)은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 (국제 IP 지수)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국제지식재산권 지수('24, 제12판)에서 산출한 지재권 프레임워크 강도를 기반으로 점수 부여

-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 비밀, 기타 형태의 지재권을 보호하여, 제약·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불균형지수에 포함
 - 지재권 보호가 취약할 경우 위조, 불법 복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점수가 낮은 국가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제재, 관세, 지재권 환경 강화 압력과 같은 대응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 다분
 -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에는 높은 점수를, 보호 수준이 중간인 국가에는 중간 점수를, 보호 수준이 약하거나 부적절한 국가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

〈그림 12〉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 IP 지수(원시값 및 가중표준점수, 가중치=0.75)



- 지재권 보호 수준이 낮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성 무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
 - 「국제IP지수」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특허권 부분에서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낮은 평가를, 저작권 보호 부문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고, 이집트는 저작권·상표 관련 권리 부문 하위 6위국에 선정
 -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일본, EU 등은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간주
- ※ 영국은 특허권, 저작권·상표 관련 권리 부문 각각 상위 10개국에 포함

IV. 결론 및 시사점

■ 정부기술혁신재단(ITIF)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계 재정립을 도모하며 통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불균형지수(Trade Imbalance Index)’를 개발

- 국가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국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무역 수지, 무역 제한 조치, 세금, 지식재산권의 4대 분야 11가지 지표를 평가
 - (①상품·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 무역상대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할 때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DP 대비 무역 수지와 같은 상대값이 아닌 무역 수지의 원시값을 분석
 - (②무역 제한 조치) 전체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벽(NTB)의 확산 정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점수를 반영
 - (③세금·규정)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의 범위, 「디지털서비스세(DST)」 범위,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 반독점 과징금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불공정 경쟁 과징금의 존재 유무를 평가
 - (④지식재산권) '24년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과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 지식재산지수*의 국가 점수를 고려

■ ITIF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불균형적 무역 흐름을 오랜시간 용인해 왔던 만큼, 상대국과의 호혜적이고 공평한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조치 모색을 바라는 방향으로 평가

- 다만,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으며,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에 대한 포괄적 기술/부문 관세 또한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같은 중간재 관세 역시 경제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도도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국경·마약 단속 등의 요구가 충족되었는데도 관세 위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협약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귀결

- 중상주의적 무역·경제 관행을 추구하는 중국은 특별한 경우로, 미 정부의 압력에도 기존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관세만 활용해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분석
 - * 환율 조작, 대규모 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
- 미국 자체적으로 혁신 기반의 경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시장 조작을 중단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맹국 연합을 결성하는 등 정교한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 호혜적 무역 관계를 추구하되,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보다 기존 관세를 철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조치를 제언
 - 미 정부의 정책 과제로서 WTO 정보기술협정(ITA)*, 의약품무역협정**, 환경상품협정(추진 중)***을 하나로 통합해 첨단 산업 분야 제품·부품 관세를 0으로 설정하는 혁신기술협정(Innovation Technology Agreement) 추진
 -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WTO 회원국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통신 제품 관세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정('96)
 -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의약품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WTO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정('94)
 -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 보호·개선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일부 WTO 회원국 간 협상 진행 중
 - 정부 차원에서 타국이 혁신 의약품에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국적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 무산 시 WTO에 제소
 - 의회는 동맹국과 FTA 체결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시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동맹국 관세 중단 및 무역 정책 입법 강화 법안(STABLE)」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 대응을 위해 「무역법」 제301조를, 거울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내국세법」을 개정
 - ※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 시행 담당 기관과 절차를 명시하고,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법」 제301조를 개정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거울세(mirror tax)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 개정
 -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보호주의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들에 한해 대외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디지털 중상주의나 지재권 도용에 가담하는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 추진 이후 2개월 간 우리 정부가 마련한 관세 관련 통합창구 ‘관세대응 119’에 3,000건 이상의 상담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는¹⁾ 등 국내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관세대응 119 개시 이후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여부, 관세율에 대한 문의가 집중(68%)
 - ※ 그 외 대체시장 진출(7%), 생산거점 이전(4%), 인증·규격 등 기타(21%) 문의로 구성
-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07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3%가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직접 영향 14.0%, 간접 영향 46.3%)²⁾
 - 영향권에 속한 기업은 미국향 수출기업에 대한 부품·원자재 납품 기업(24.3%), 미국향 완제품 수출 기업(14.2%), 중국향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 이는 미국향 직접 수출 기업을 비롯해 미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 및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
 - ※ 업종별로는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우리 정부는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³⁾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유예 기간(90일) 동안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내 기업의 대비를 지원할 계획

- ※ 기본 관세 10% 외, 중국 125%, EU 20%, 일본 24%, 우리나라 25% 등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⁴⁾ 이후 90일간 시행 유예 결정⁵⁾
-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을 목표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구성해 총력 대응 예정
 - 세부적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부처 간 협업체계 운영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품목 분류 서비스 제고, 원산지 판정 지원, 수출신고 부담완화,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

1) 산업통상자원부, 관세대응 119, 두 달 동안 3천건 이상 상담, 2025.04.22

2)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 2025.04.02

3) 관세청,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2025.04.11.

4) White House,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04.02.

5) White House,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2025.04.09.

■ 한편, 미국 정부가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ITIF의 무역 불균형지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수의 평가 기준과 산출 방법을 파악에 정부와 기업 대응 시 활용 가능

-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무역 수지, 관세·비관세 장벽, 디지털세, 지재권 보호 수준 등 세부 항목별로 한국의 위치와 위험 요인, 강점을 파악하고 대미 협상 전략의 기초 자료로 이용
-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IT서비스 무역수지, 단순평균관세율, 디지털 경제/반독점 과징금 등 일부 영역이 불공정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통상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 반영
- 무역 불균형지수가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미국 무역정책의 예측 지표로서의 기능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EU·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공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발간현황

2025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5-01	인공지능(AI) 시대 인력 개발의 미래	2025.01
2025-0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2025.02
2025-03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	2025.03
2025-04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	2025.04

2024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4-01	영국 배터리 전략	2024.01
2024-02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	2024.02
2024-03	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2024.03
2024-04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2024.04
2024-05	미국 반도체 산업 인력 정책 제언	2024.05
2024-06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DX 전략	2024.06
2024-07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4	2024.07
2024-08	글로벌 생성형 AI 특허 현황	2024.08
2024-09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 현황	2024.09
2024-10	ASPI 핵심 기술 연구 성과 모니터링	2024.10
2024-11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한계 고찰	2024.11
2024-12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2024.12

2023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3-01	미국 바이오제조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23.01
2023-02	중국 산업 디지털화·친환경화 통합 발전 제언	2023.02
2023-03	유럽 넷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	2023.03
2023-04	EU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및 재료 수요 예측	2023.04
2023-05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비전과 전략	2023.05
2023-06	주요국 반도체 정책과 미 의회 역할 검토	2023.06
2023-07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 및 산업 동향	2023.07
2023-08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 동향	2023.08
2023-09	글로벌 원자력 보급 과제와 대응 조치 고찰	2023.09
2023-10	중국 기술 정책 현황 및 미국의 대응 방향	2023.10
2023-11	EU 우주, 방위 및 관련 민간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분석	2023.11
2023-12	미국 핵심·신흥기술 수출통제 조치 고찰	2023.12

2022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2-01	OECD, 국경을 초월한 정부 혁신 달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1
2022-02	2022 글로벌 에너지 의제	2022.02
2022-03	일본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	2022.03
2022-04	2050 미래 우주 공간 활용: 영국 국가우주전략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2022.04
2022-05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2022.05
2022-06	유럽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금속 수요 전망 및 대응	2022.06
2022-07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 추진 현황	2022.07
2022-08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소 개발 비전과 주요 정책 동향	2022.08
2022-09	중국 CCUS 실증·보급 현황 및 정책제언	2022.09
2022-10	미국 에너지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2022.10
2022-11	미국 첨단제조 국가 전략	2022.11
2022-12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

■ 2021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1-01	유럽 녹색산업정책을 위한 제언	2021.01
2021-02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제언	2021.03
2021-03	기후 주도 무역 아젠다를 위한 제언	2021.04
2021-04	중국 14.5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5
2021-05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현황 및 전망	2021.06
2021-06	유럽 그린딜에서의 인공지능 역할과 시사점	2021.07
2021-07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① : 반도체 및 배터리	2021.07
2021-08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② : 핵심 광물·소재 및 의약품	2021.08
2021-09	유럽 첨단기술 동향 및 차세대 신흥기술 확산 전망 고찰	2021.10
2021-10	OECD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1
2021-11	IEA 글로벌 수소리뷰 2021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2
2021-12	CX2030 가상현실에 의한 '30년 커뮤니케이션 전환	2021.12

■ 2020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0-01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 분석 : 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	2020.01
2020-02	일본, 제 11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미래상'	2020.02
2020-03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 AV 4.0	2020.04
2020-04	주요국 규제 사례를 통해 본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방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4
2020-05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OECD의 분야별 정책 권고 주요 내용	2020.06
2020-06	혁신 창출 환경 및 주요 산업별 혁신 변화의 추이와 전망	2020.07
2020-07	영국의 넷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인력 정책 방향 제언	2020.08
2020-08	EU·독일·호주 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08
2020-09	최근 미국과 중국 AI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0.09
2020-10	연구개발·혁신 파이낸싱 동향과 정책 과제	2020.10
2020-11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미국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산업 발전 방안 제언	2020.11
2020-12	디지털 시대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020.12

2019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19-01	「미국 혁신 촉진을 위한 투자수익 이니셔티브」 독서 초안	2019.01
2019-02	주요국 연구자금 지원기관 조직설계 및 거버넌스	2019.02
2019-03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2019.03
2019-04	독일의 포괄적인 AI 생태계 조성 전략	2019.05
2019-05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2019.05
2019-06	OECD 국가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	2019.06
2019-07	중국 : 산업 및 혁신강국으로의 도전과 전망	2019.07
2019-08	영국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기 보급방안	2019.08
2019-09	Horizon Europe(2021-2027)의 산업혁신 프레임워크	2019.09
2019-10	AI 산업 및 국가별 정책 동향	2019.11
2019-11	주요국의 R&D 예산 및 투자 전략(I):미국의 NITRD와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을 중심으로	2019.12
2019-12	주요국의 R&D 예산과 투자 전략(II):R&D 및 기업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2019.12
2019-13	주요국의 R&D 전략과 예산배분 시스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망	2019.12
2019-14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분석:미국·일본·중국·인도	2019.12

※ ~ 2025년 현재까지 발간물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열람 가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KIAT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Brief

발 행 일	2025년 4월
발 행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발 행 인	민병주 원장
기획/진행	문희수 실장, 정휘상 선임연구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02-6009-3593 www.kiat.or.kr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